



천안함 함미가 인양된지 이틀째인 16일 백령도 해상 바지선에서 군관인 합동조사단의 함미 부분 조사와 실종자 수색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해군헬기 진도 해상 추락

3함대 대잠초계비행 중...1명 사망·3명 실종

15일 오후 8시 58분께 진도 동남쪽 14.5km 해상에서 해상에서 해군 3함대 소속 링스헬기 1대가 추락, 권태하(32) 대위가 숨지고 3명이 실종됐다.



故 권태하 대위



15일 오후 8시 58분께 추락 중인 4명 탑승 링스헬기 1대. 링스 헬기 등 모두 32척의 함정과 함께 해군, 해경 헬기가 동원돼 입체적인 수색작업이 전개되고 있다.

이들께 수색작업에서 해경은 헬기 날개 부분을 비롯해 소형 낙하산, 조종석 의자, 헬기 내부 파편, 가로 1m, 세로 40cm 크기의 진회색 FRP 파편 등 헬기 잔해물을 거둬들이고 3함대에 인계했다. 해경은 해상에 북서풍이 초당 8~10m, 파고 1.5m, 가시거리 400m로

양호한 상태를 보임에 따라 헬기 조종사 권 대위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진도 조도면 독거도 동쪽 2.2km)을 중심으로 반경 13km범위를 집중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조종사 권 대위 시신은 3함대를 거쳐 함평 국군병원에 안치됐다.

시신을 발견한 목포해경 126정 한 경찰관은 "권 대위는 발견 당시 헬기의 본체에서 이탈된 조종석 의자에 앉은 채 숨져 있었다"며 "소형 낙하산이 퍼졌지만, 의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함대는 "링스헬기는 평소 초계활동용을 위해 전날 오후 8시 이륙해 2시간가량 비행구역을 순회한 뒤 복귀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초계 활동은 북한의 잠수함 및 잠수정의 탐색 활동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링스헬기는 적 잠수함을 감시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지만 우리 조업구역을 침범하는 불법조업 어선 등도 감시하고 있다. 링스헬기는 순항속도 234km/h, 최대 체공시간 2시간 50분으로 대잠·대함 작전에 적합한 무장과 항공 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다. /연합뉴스

“침몰원인 밝혀질 파편 일부 발견”

민·군 합동조사단 외부폭발 가능성... 후속조치 단호히

사망 승조원 '전사자' 예우 방침

천안함 침몰 사고를 조사중인 민·군 합동조사단은 16일 "선체 절단면과 선체 내·외부에 대한 육안 검사결과, 내부 폭발보다는 외부 폭발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합조단 윤덕용 공동단장은 이날 천안함 함미 인양에 따른 현장조사 결

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최종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함수를 인양하고 잔해물을 수거한 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군을 중심으로 한 합조단이 천안함의 외부폭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북한 연관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윤 단장은 "천안함 함미 선체부분을 조사한 결과 탄약고와 연료탱크, 디젤엔진실에는 손상이 없었고, 가스 터빈실의 화재흔적이 없었으며, 전선 피복상태도 양호했다"며 "선체의 손상형태로 볼 때 내부폭발에 의한 선체절단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도, 해저지형도 등을 확인한 결과 침몰지점에 해저장애물이 없고 배 아래에 찢긴 흔적이 없어, 좌초에 의한 선체절단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좌초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이어 "피로에 의한 파괴의 경우에는 선체 외벽을 이루는 철판이 단순한 형태로 절단되어야 하나 선체 외벽의 절단면은 크게 변형되어 손상형태가 매우 복잡해 '피로 파괴(fatigue fracture)에 의한 선체절단 가능성도 매우 제한된다'고 피로파괴설도 일축했다.

박정기 공동단장은 파편 수거와 관련, "(천안함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을 분석할 일부 조각을 발견했고,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혀 침몰 원인이 이른 시일내에 밝혀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처럼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외부 폭발'로 가닥이 잡혀가자 "우리 정부와 군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국가안보차원의 중대

한 사태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앞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명확하고 단호하게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사건 처리에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초래하게 되어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 처리와 관련해 감사원에 직무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사고로 숨진 승조원 전원에 대해 '전사자(戰死者)에 착수했다'고 밝힌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감사원은 순국장병들의 영결식 등 사고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집중 감사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익교설립 56주년 (1954 ~ 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호남 야권연대 협상 19일까지 연장

야권의 6·2지방선거 연대 협상 시한이 오는 19일로 연장됐다. 야권연대의 한 축인 4개 시민사회 단체는 16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협상 시한인 15일까지 밤샘 협상을 진행했으나 호남지역에 대한 의견이 절충되지 못해 민주당의 요청으로 시한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지사 후보단일화와 서울과 경기지역의 기초단체장 배분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의견점근

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사 단일후보는 다음달 2일 김진표(민주), 안동섭(민노), 유시민(참여) 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50% + 국민선거인단투표 50% 경선을 통해 뽑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서울시장 후보는 각 당간 협의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선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점근을 봤다.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민주당이 서울의 구청 4곳과 경기도의 시

3곳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다른 야당이 단일후보를 내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이 광진(참여), 중구(창초), 중랑(시민사회), 성동(민노)이고 경기도는 김포, 인천(이상 참여), 하남(민노)이다. 협상의 막판 걸림돌이었던 광역의원 공천배분 문제는 민주당이 서울 10곳, 경기 20곳을 다른 야당에 양보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리됐다. 광역지역인 호남의 경우 순천과 광주 1곳(서구 또는 북구) 등 기초단체장 2곳이 거론되고 있으나 민주당 내 반발이 거세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